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21대 국회 성평등 입법 대응, 속도 낼 필요

작성자 : 이동선 부연구위원, 김정수 전문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¹⁾ 조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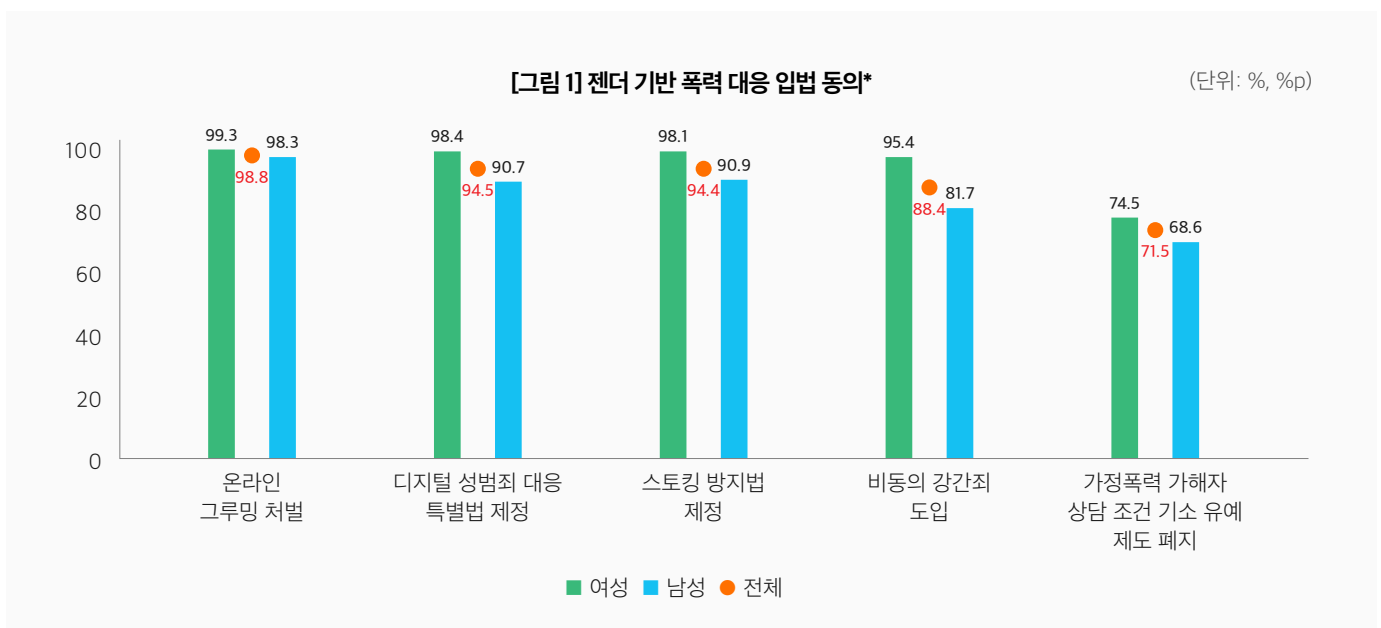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 우선적인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를 시행함.
- 조사결과, 우리 사회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성차별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
 - 국민 대다수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온라인 그루밍 처벌'(98.8%),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94.5%), '스토킹 방지법 제정'(94.4%) 순이었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조건 기소 유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8명 이상이 동의하였음.
 -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전면 폐지, 노동시장 성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찬성하였는데,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 또한 존재함.
-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톱킹 방지법 등의 제정과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주요 성평등 입법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1) 성평등 입법과제는 여성대상 폭력 근절,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주요 성평등 영역에서 지금까지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을 비롯해, 여성계의 입법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않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만18~69세 성인 남녀
표본크기	1,500명 (남성 760명 50.7%, 여성 740명 49.3%)
조사지역	17개 시/도
표본추출	시/도, 성별,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고려 비례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방법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가중치부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조사기간	2020년 5월 14일 ~ 5월 20일(7일간)
응답률	10.5%
조사기관	(주) 한국리서치

젠더 기반 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높게 형성

- 국민 대다수(전체 응답자의 90% 이상)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가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젠더 기반 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상당히 높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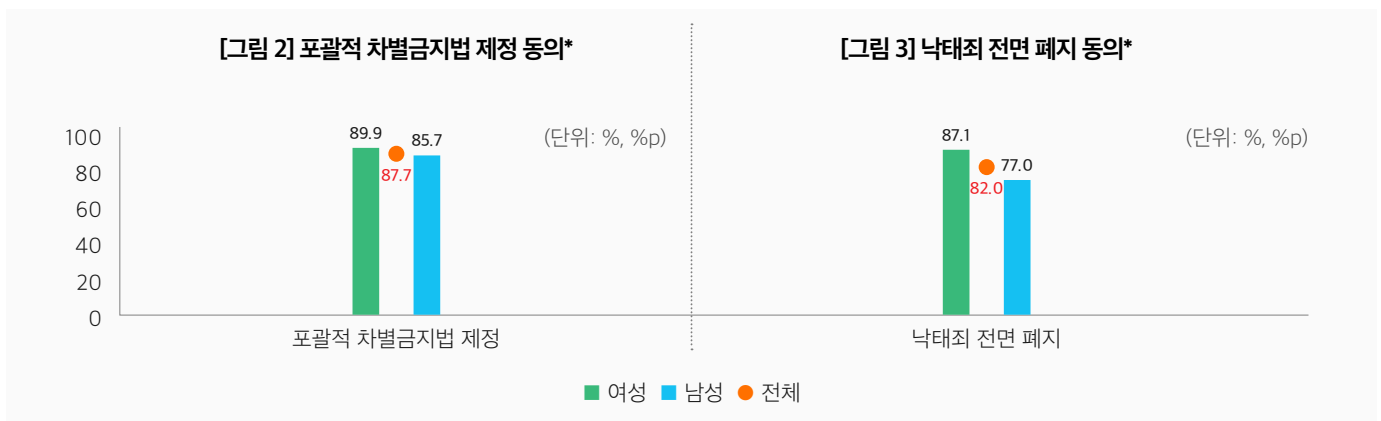


주: 동의 정도는 '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응답을 합친 값임

- 여성 99.3%, 남성 98.3% 등 응답자의 98.8%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은 후 이들을 유인하여 성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온라인 그루밍 처벌)’는 데 동의하였고,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는 데 여성 98.4%, 남성 90.7%로 응답자의 94.5%가 동의함.
- 현행법상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스토킹 방지법 제정)’는 데 94.4%(여성 98.1%, 남성 90.9%)가 동의하였음.
-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조건 기소 유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8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됨.
 - ‘폭행·협박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응답자 중 88.4%(여성 95.4%, 남성 81.7%)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검찰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조건 기소 유예 제도 폐지)’는 의견에 응답자의 71.5%(여성 74.5%, 남성 68.6%)가 동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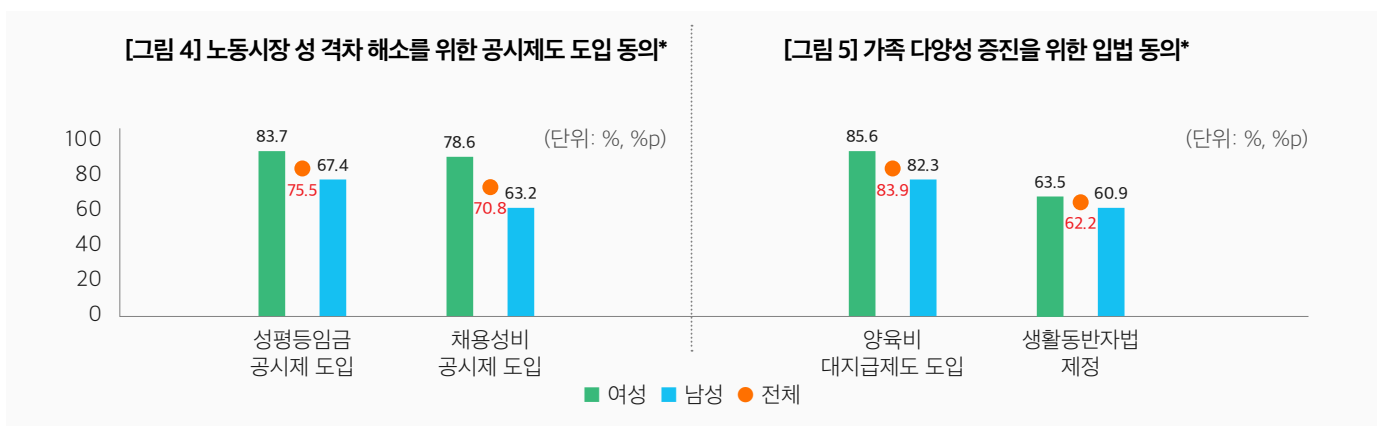
포괄적 차별금지와 낙태죄 전면 폐지, 노동시장 성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국민적 동의 수준 상당해

- 응답자 중 87.7%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 기반 강화에 찬성하고 있었음[그림 2].
 -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에 여성은 89.8%, 남성은 85.7%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여성과 남성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냄.
- 국민 10명 중 8명은 낙태죄 전면 폐지에 동의하고 있음[그림 3].
 -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에 대해 여성 87.1%, 남성 77.0%로 응답자의 82.0%가 동의하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가 다소 높음.



주: 동의 정도는 ‘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응답을 합친 값임

- 10명 중 7명 이상이 성평등임금 공시제와 채용성비 공시제 도입에 동의해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그림 4].
 -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기업이 남녀의 임금 격차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 응답자 중 75.5%가 동의하였는데, 여성 83.7%, 남성 67.4%로 성별 간 다소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채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기업이 채용 시 응시자와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동의하였음.
-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해 가족 다양성 증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그림 5].
 -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여성 85.6%, 남성 82.3%였음.
 -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하여, 상속·복지 등에서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여성 63.5%, 남성 60.9%로 나타남.



주: 동의 정도는 ‘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응답을 합친 값임

적극적인 성평등 입법 추진과 함께 남녀 모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병행 필요

- 우리 사회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성차별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식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21대 국회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주요 성평등 입법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기술기반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적극적 대처 요구가 확대된 만큼 온라인 그루밍 처벌, 스토킹 방지법 제정 등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요구됨.
-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은 성평등 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남녀 모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면서 제도 도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성평등 현안 입법에 대한 성별 동의 정도(%)				
영역	문항	전체	여성	남성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온라인 그루밍 처벌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은 후 이들을 유인하여 성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98.8	99.3	98.3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94.5	98.4	90.7
	스토킹 방지법 제정 스토킹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94.4	98.1	90.9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폭행·협박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88.4	95.4	81.7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조건 기소 유예 제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검찰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71.5	74.5	68.6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87.7	89.8	85.7
낙태죄 폐지	낙태죄 전면 폐지 동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82	87.1	77
노동 시장 성 격차 해소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기업이 남녀의 임금 격차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5.5	83.7	67.4
	채용성비 공시제 도입 채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기업이 채용 시 응시자와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0.8	78.6	63.2
가족 다양성 증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3.9	85.6	82.3
	생활동반자법 제정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하여 상속·복지 등에서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2.2	63.5	60.9

주: 제시된 응답율(전체/여성/남성)은 '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응답을 합친 값임